



주간통일정세 2011-05(2011.01.24~01.3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0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이집트 오라스콤회장 접견(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3일 방북 중인 이집트의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을 접견했다고 보도
- 또 김 위원장의 매제인 당 정치국 후보위원 장성택(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고 전함.
- 장성택은 작년 7월 만들어진 북한의 외자유치 전담창구 ‘합영투자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김 위원장 공개활동 수행횟수 1위였던 장성택이 올해 들어 북한매체에 거명된 것은 처음
- 오라스콤은 2008년 12월 75%의 지분(북한 체신성 25%) 투자로 ‘고려링크’를 설립, 평양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 그 후 서비스 지역이 북한 내 12개 주요 도시와 42개 소도시로 넓어졌고 가입자수도 작년 3분기 말 현재 30만1천19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 이상 늘어남.

● 北 김정남 “김정일도 원래는 세습 반대”(1/28, 도쿄신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아버지(김정일)는 (3대) 세습에 반대였지만,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짐.
- 김정남은 이 인터뷰에서 “때때로 (아버지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김정일을 보좌하는 김경희나 장성택과도)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후에 퍼진 암살 미수설이나 중국 등으로의 망명설도 “근거가 없는 소문이다. 위협을 느낀 적은 없다”고 부인
- 동생인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가 구축된 데 대해서는 “중국의 모택동 주석조차 세습하지는 않았다”며 “사회주의에 어울리지 않고, 아버지(김정일)도 반대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김정남은 “(후계는)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한다. 북의 불안정은 주변의 불안으로 연결된다”고 이해를 구함. 김정남이 북한을 ‘북한’이라고 표현했는지, ‘북조선’이라고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핵 보유나 선군 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이들이 있다”며 권력 중추로 부상한 군의 소행이라는 인식을 보였고, 북한이 2009년 말에 단행한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실패였다. 개혁개



방에 관심을 뒤야 한다. 현 상태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北김정은, 김정일 수준 의견·예우 눈길(1/29, 연합뉴스)**

-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수준의 의견을 하고 있어 눈길,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전하면서 김정은의 ‘단독샷’을 많이 공개하는 점임.
- 실제로 조선중앙TV는 작년 10월9일 김정일 위원장의 국립연극극장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혼자 다른 수행인사를 거느리고 서 있는 모습을 전함.

● **北매체, 김정은 생일 ‘1월명절’ 언급(1/28, 우리민족끼리, 1/30 연합뉴스)**

-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이상화하는 글을 또 게재하면서,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1월 명절’이라고 언급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비전향장기수 김동기가 썼다는 ‘1월에 비낀 애국장정의 세계’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이 글은 “1월 8일 올해의 첫눈이 내렸다. 우리 인민은 새해의 첫 문을 열자마자 대장복 넘치는 1월명절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그 눈송이들은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을 대대로 누리는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는 하늘의 축복인듯싶었다”고 밝힘.
- 글은 또 지난해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근위서울류경수제 105탱크사단’을 방문해 남한 공격상황을 상정한 ‘가상훈련’을 참관한 것과 관련, “그날의 훈련에 존경하는 대장동지께서 친히 참가하셨다”고 밝힘.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군사훈련 참가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이 작년 ‘9.28당대표자회’ 전날 인민군 대장칭호를 받기 오래전부터 군 경력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임.

● **北김정일, 함흥 주요 기업소 현지지도(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함흥시의 주요 기업소를 현지지도(시찰)했다고 보도
- 공군사령부 협주단 전자악단의 공연 관람 이후 나흘만으로, 김 위원장의 고위급 수행원 명단에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언급되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 외에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방문해 공장 설비들을 둘러본 뒤 “함흥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큰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의 함흥시 기업소 시찰은 작년 11월30일(룡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과 12월1일(백운산종합식료공장 등) 보도 이후 약 두달 만에 다시 이뤄진 것

■ 김정일동향

- 1/26 김정일·김정은, 공군사령부 전자악단 공연 관람(1/26, 중통)
 - 김기남·최태복(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와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최룡해·김평해(당 비서), 문경덕(당 비서와 평양시 당 책임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원홍(보위사령관), 리병철(공군사령관), 국방위 국장인 현철해·리명수 등이 수행
- 1/30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외에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1/30, 중통)
 -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홍석형(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인 태종수(당 비서)·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광범기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군인 동영상 공개··“김정은 나이도 몰라”(1/25, NK지식인연대)
 - 남자가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영상을 공개

나. 경제

- 北합영투자위원장에 리철 전 스위스 대사 확인(1/24,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외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리철 전 스위스 대사가 외자 유치 총괄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24일 확인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이집트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의 귀환 소식을 전하면서 “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수영 등 관계부문 일꾼들이 이사장을 전송했다”고 밝힘.
 - 리철 전 대사의 본명은 ‘리수영’으로, 대외적으로 가명을 쓰는 김 위원장의 다른 서기실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리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함.
- 北, 작년 중국서 사상 최대규모 쌀 수입(1/2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만3천945t의 쌀을 수입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중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이는 전년보다 5천t, 종전에 가장 많았던 2007년(8만1천t)보다는 3천 정도 많은 것으로, 수입액에서도 사상 최고인 미화 3천544만 달러를 기록
 -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했던 옥수수의 경우 작년 수입량이 전년보다 1만5천t 적은 8만7천631t으로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2천350만달러로 전년(2천430만달러)과 비슷했음.
 - 지난해 양국간 농수산물 교역액은 총 3억5천390만3천달러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북한은 8천99만8천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쳐 1억9천107만달러의 적자를 봤음.
 -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은 쌀, 옥수수, 식용유, 설탕, 목화, 버섯 등이었는데, 수입액에서는 식용유가 3천585만1천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은 쌀, 옥수수 순이었으며, 수출품 중에는 오징어 등 연체동물류와 냉동어류가 3분의 2를 차지
 - VOA는 “중국의 대북 원조 등 비공식적 지원은 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힘.
- **北, 對中광물수출 총력…외화난 때문인 듯(1/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심각한 외화난에 처한 북한이 대 중국 광산물 수출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
 - 북한산 광산물 무역을 증개하는 조선족 사업가 박모씨는 이 방송에 “북한 무역총회사 간부들이 찾아와 경쟁적으로 광산물 수출상담을 제의하고 있다”면서 “석탄, 철광석, 몰리브덴 같은 종전의 수출품목 외에 구리, 금, 알루미늄 광석을 팔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함.
 - 또 “북한에서 광산물은 군(軍)이나 당의 특정무역회사들만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인데 여러 무역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물수출을 적극 독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
- **北매체, 경공업 키우면 모두 덕봐(1/25, 우리민족끼리)**
 - 주민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북한 매체의 ‘경공업 예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경공업은 다른 부문과 밀접히 연관돼 모든 사람들이 경공업 덕을 본다”면서 “경공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은, 인민들이 실질적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 **北신문 “석탄 많이 캐야 산다”…1면사설 증산 촉구(1/26, 조선중앙방송·노동신문)**
 -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 사설을 통해 석탄 증산을 촉구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 사설에서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면서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룡등탄광, 재남탄광, 봉천탄광 등 매장량이 많



고 채굴 조건이 좋은 탄광에 힘을 집중해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힘.

● **北쌀값 폭등…2주간 50% 이상 올라(1/26, 좋은벗들)**

- 최근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의 쌀값이 균량미 징수,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초보다 50% 이상 올라 일제히 kg당 3천원을 넘어섰다고 보도
- 2009년 11월 말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이 이뤄진 이후 북한 주요 도시의 쌀값이 신권 표시 가격으로 3천원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
- 화폐개혁 직전 평양의 쌀값이 구권 2천200원(신권 22원 해당) 전후였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서 물가지표 역할을 하는 쌀값에 무려 1만 4천5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셈임.

● **北-中 무역 작년 34억달러…사상 최대(1/27,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작년에 30% 증가한 34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
- 중국 세관의 집계 결과 작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34억7천168만 달러로 전년대비 29.6% 증가,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의 북한과 중국 무역액임.
-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50.6% 증가한 11억9천323만 달러로 석탄과 수산물 등이 많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은 20.8% 증가한 22억7천845만 달러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이 많이 늘었음.
- 2009년의 북-중 무역액은 5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와 11월에 실시된 디노미네이션에 의한 혼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 감소

● **北쌀값 이번엔 급락…일주일새 40% ↓(1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이번에는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고 보도
-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의 가격은 지난 22일 kg당 3천 300원에서 28일 현재 2천원으로 40% 가까이 떨어졌고, 환율도 같은 기간 인민폐 1위안당 520원에서 400원으로 동반 하락했음.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은 “지난 22일 종업원회의 때 공장 초급당 비서가 나와 ‘외국의 대규모 식량원조가 임박해있다’고 말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을 전후해 한 달분의 배급을 준다는 소문도 들고 있다”고 말했음.
- 소식통은 “이런저런 소문에 불안해진 장사꾼들이 비축해뒀던 쌀을 대량으로 풀어 식량가격이 폭락한 것”이라고 주장
- 방송은 또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새해 들어 ‘공동사설 학습기간’으로 장마당이 일부 통제돼 쌀값이 올랐었는데 1월20일 학습기간이 끝



나면서 장마당 통제가 풀려 가격이 내려갔다”고 전함.

- 한편 방송은 강제 징수로 쌀값 상승의 원인이 됐던 군량미가 뒤로 빼돌려서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고 밝힘.

다. 군사

● 북한군, 식량사정 악화로 훈련 취소(1/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군이 식량사정 악화로 동계훈련의 하나인 ‘쌍방훈련’을 취소했다고 보도
- ‘신의주시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군 당국은 올해 1월에 전국적인 ‘쌍방훈련’을 계획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부대별 내무훈련으로 대체했다”면서 “인민무력부는 지난 10일 모든 부대에 쌍방훈련을 위한 준비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훈련 중단 이유에 대해 “군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아 탈영병과 환자가 급증하는 실정에서 대기동과 잠복을 동반하는 훈련@이유리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현재 전·후방 군단의 많@이장교는 탈영병을 찾으려고 부대를 떠나있는 상황”이라고 말함.
- 한편 ‘데일리NK’도 이날 양강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의 식량실태와 피복상황 등 후방사업과 병사들의 훈련 기강을 점검하기 위해 총참모부 ‘검열조’가 일선부대에 파견돼 실사에 들어갔다”면서 “병사들의 먹는 문제와 피복문제가 심각해 검열조를 파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해당 군부대 장교와 병사들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힘.

● 北, 군량미 10만t 징수 나서…주민 동요(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주민들한테 군량미 헌납을 독려하다 실적이 저조하자 10만t을 목표로 강제 징수에 나섰다고 보도
- 이 방송은 함경남도 ‘함흥시 간부’의 말을 인용, “22일 현재 함경남도에서 걷힌 군량미가 550t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도 1만t을 넘지 못할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까지 무조건 10만t을 걷으라는 지시가 떨어져 도당 조직부장 책임 아래 도와시, 군 인민위원회에 ‘군량미 상무’가 조직됐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함경남도의 경우 세대당 50kg의 군량미를 할당하고 납부가 저조한 조직별로 강도 높은 사상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군량미 할당 때문에 군수공장 노동자, 당 기관과 사법기관 일꾼조차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군대 식량난 심각…집단탈영 강탈도 빈번(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의 군부대에도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집단 탈영한 군인들이 주민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일까지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



- 북-중 국경지역에서 만난 주민 모씨의 전언을 인용, “강원도 휴전선 지역을 지키는 1군단과 5군단 소속 부대의 군인들이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집단 탈영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서 “이들 군인은 ‘고생하는 인민군대를 지원하라’면서 주민들한테 식량 등을 빼앗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다”고 말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방송에 “지난해 중앙당이 수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협동농장의 군량미 징수를 대폭 경감해주는 바람에 군량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영양실조 군인이 급증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보니 군대의 부패도 심해졌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김정일, 백두산 화산 대책마련 지시(1/25, 데일리NK)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보도
- 이 매체는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당 중앙위 비서국 명의의 지시문이 내려왔다”면서 “화산폭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량강도와 함경북도 지역 당 위원회 간부합동회의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힘.
- “그동안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을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일축해온 북한 당국이 직접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은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화산폭발 가능성을 접한 주민들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北주체사상 관광상품 출시…돈주고 배우러 갈까?(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의 한 여행사가 북한 당국의 제의를 받아 ‘주체사상 연수여행(Juche Study Tour)’ 상품을 출시했다고 보도
- 이 상품을 판매하는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의 가레스 존슨 대표는 RFA에 “1~2주간 북한을 관광하면서 노동당 전문가한테 주체사상 강의를 듣는 상품에 대해 북한의 조선국제관광회사(KITC)와 협의했다”면서 “2월 말 출발하는 일정에 각각 뉴질랜드와 스위스 국적인 학생 2명이 등록했다”고 밝힘.

● 北 5세미만 아동 10명 중 3명꼴 발육부진(1/27, 미국의소리(VOA))

-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아주 나빠 발육부진, 저체중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2009년 현재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19%가 저체중(나이보다 체중 미달), 32%가 발육부진(나이보다 신장 미달), 5%가 저체력(신장보다 체중 미달) 상태



-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의 편차가 커, 농촌의 저체중률(27%)과 발육부진율(45%)이 도시(저체중률 13%, 발육부진율 23%)의 2배 수준, 또 2세 미만 영아를 둔 어머니(15~49세) 가운데 26%도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의 중앙통계국과 아동영양연구소는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을 받아 2009년 9월28일부터 10월20일까지 7천500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보건, 위생, 교육, 생활환경 등의 ‘종합지표’를 조사했고, 유니세프 보고서는 그 결과를 정리
- VOA는 “종합지표를 담은 유니세프 보고서가 나온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이 기간 저체중률은 28%에서 19%로, 발육부진율은 45%에서 32%, 저체력은 10%에서 5%로 떨어졌지만 저체중아(2.5kg 미만) 출생률은 6.4%에서 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

● 北, 전선 절도사건 다시 기승(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밀수출을 목적으로 전력설비와 전선을 훔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
- 복수의 ‘량강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량강도 삼수군을 통과하는 6만kW 고압송전선 가운데 수 백m 구간을 누군가 잘라 갔다”면서 “이 사건으로 지난 17~21일 정전사태가 빚어져 북한 최대의 구리 생산기지로 알려진 해산청년광산이 가동을 멈추고, 주변 공장·기업소 대부분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 北고위층, 라선 카지노서 도박 즐겨(1/27, NK지식인연대)

- 북한의 고위 간부와 부유층이 라선시에서 홍콩 자본이 운영하는 호텔 카지노를 자주 출입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 ‘내부 통신원’을 인용,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라선시 중심가의 엠페리(英皇) 호텔 카지노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년 전부터 카지노 영업이 이뤄졌다”면서 “북한 고위간부들과 부유층이 이 카지노에서 하루 평균 베탱하는 현금액수가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전쟁영웅’ 이백겸, 재작년 말 굶어죽어(1/26, RFA)

2. 대외정세

● 1962년 불가리아 北 유학생 망명에 양국 냉각(1/24, 연합뉴스)

- 49년 전 불가리아 북한 유학생의 망명으로 두 나라 관계가 수년 간 냉각됐으며 북한이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집회를 불가리아에 요청



- 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최근 기밀 해제된 불가리아 국립 문서보존소의 북한 관련 기록물을 입수해 24일 공개
 - 1962년 8월 이상중씨 등 북한의 국비 유학생 4명이 김일성 독재 체제에 반대하며 불가리아에서 망명을 선언했다가 북한 대사관에 억류됐으나 현지 정부의 도움으로 풀려남.
 - 북한은 유학생들의 망명을 허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1968년까지 6년간 불가리아와 문화교류 등을 전면 중단, 불가리아 정부는 1968년 9월9일 북한의 건국 20주년 즈음에 김일성 주석에게 ‘우호 관계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이 1957년 불가리아에 토지개량과 벼농사 등 농업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도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북한의 식량문제가 1950년대 말부터 본격화됐고 이 해결책으로 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
- **北 과거 청산해야 北日 관계개선 가능(1/25, 조선중앙통신)**
 -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日北 국교정상화 추진’ 발언에 대해 북한이 ‘선(先) 과거청산’을 요구
 -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일관계 해결의 근본은 과거 청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정책작성자들이 조일(북일) 현안 문제와 관계 개선에 관심을 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그러나 과거 죄악을 덮어두고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인민과 인류 양심, 정의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
 - 한편 간 총리는 24일 일본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 같은 도발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한 뒤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도모하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일북)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힘.
 - **유엔 北인권보고관 방일…납치문제 등 논의(1/25, 연합뉴스)**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5일 일본을 방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 등 일본 관리들을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
 - **北선박 1척, 소말리아 해적에 10개월째 억류중(1/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선박 1척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10개월째 억류 중이라고 보도
 - 국제해사국(IMB)의 ‘2010년 해적과 무장강도에 의한 선박납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3월31일 소말리아 근해를 지나던 북한의 칠



산봉청년호가 해적에 납치돼 현재까지 억류 중”이라면서 “이 배의 선원 9명은 무장한 해적들에 저항하다가 부상했다”고 밝힘.

- **北 “정말 어렵다”…전방위 식량 확보전(1/28,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중을 비롯한 관련국들을 상대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8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뉴욕채널 등을 통해 미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요구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대규모 쌀지원을 요청했음.

- **유엔 北대표부, 김정일 생일에 외교관 초청(1/29, 미국의 소리(VOA))**
 -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오는 2월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9회 생일을 앞두고 유엔 주재 각국 외교관을 생일 축하연회에 초청했다고 보도
 -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신선호 대사 명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축하 연회 초청장을 발송했다”면서 “초청장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한 연회에 초대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어와 영어 두 종류로 제작됐다”고 전함.
 - 초청장에 따르면 연회는 내달 15일 오후 6시(미국 동부 시간)부터 두 시간 동안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열림.

3. 대남정세

- **정부, 北에 비핵화회담 수용 촉구(1/26,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남북당국 간 회담 제안을 북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핵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안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정부, 군사실무회담 내달 11일 판문점 제의(1/26, 연합뉴스)**
 - 국방부는 26일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의 의제와 장소 등을 협의할 실무회담(예비회담)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
 -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군 통신선을 이용해 김관진 국방장관 명의로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의 답신 전화통지문을 발송



- **北외무성, 전제조건·대화 순서 내세우지 말아야(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6일 한반도에서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하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그에 합당한 의제를 취급하도록 하며 공통점은 찾고 차이점은 뒤로 미루는 원칙에서 얽힌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대화자세”라면서 이같이 말함.
 - 대변인은 “조선반도에서 조미(북미), 북남 사이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한 어느 일방의 행동은 타방에 도발로 비치기 마련”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조성해나감으로써 서로 도발로 간주되는 행동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자신들의 대화 의지를 강조
 - “조선반도 핵문제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생된 문제로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혀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평화협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임을 시사

- **北조국전선, 남북 국회회담 제의(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국회격)와 우리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했다고 보도
 - 조국전선은 이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우리는 북남 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다”고 밝힘.
 - 이 기구는 이어 “북남 사이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대결의 냉기를 가시고 화해의 따뜻한 기운이 넘치게 하자”면서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길을 하루 빨리 다시 이으며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나갈 때 평화와 통일이 그만큼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
 - 조국전선은 노동당의 통일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해 설립된 전위기구로, 노동당을 비롯한 24개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남북간 주요 사안이 생겼을 때 종종 전면에서 나서 입장을 밝혀옴.

- **北, 한반도 비핵화, 9.19 성명 이행지지(1/28, 연합뉴스)**

 -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지지한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8일 밝힘.
 -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평양 주재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핵 문제



- 는 북한에 핵 위협을 가한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 및 남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성이 유지되는 한 어느 한 편의 활동은 도발로 해석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전 조건 없이 평화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 이유”라고 강조
 - 외무성 대변인은 이해당사국들은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구체적 의제를 가진 대화를 시작하는 용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리, 남북 군사회담 재개 추진 재차 환영(1/30)

- 러시아가 29일 남북한 군사 당국 간 대화 재개 합의에 또다시 환영 의사를 밝혔음.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하루 전 서울에서 열린 알렉 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간 면담과 관련한 언론 발표문을 내고 이 회동에서 “러시아 측은 서울과 평양이 양국 국방 당국 간 대화를 재개키로 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음.
- 발표문은 또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한 화해 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반도 핵 문제 조율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 北, “한반도 비핵화, 9.19 성명 이행 지지”(1/29)

-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지지한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8일 밝혔음.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평양 주재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핵 문제는 북한에 핵 위협을 가한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 및 남한과의 관계에서 적대성이 유지되는 한 어느 한 편의 활동은 도발로 해석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전 조건 없이 평화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북한은 자신들의 제의로 전쟁 위협으로 내몰렸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희망이 나타났다고 믿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해당사국들은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구체적 의제를 가진 대화를 시작하는 용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남북 국회 간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 “러시아, 北 UEP 안보리 논의 반대안해”(1/28)

- 러시아가 28일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러시아의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의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UEP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UEP를 다뤄야 한다는데 대해 러시아와의 우리의 입장이 유사하다”며 “양측은 UEP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대응에서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그는 다만 “이날 회동이 안보리 논의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안보리를 선호하지만 러시아는 여러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러시아가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양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회동에서 우리측은 남북대화 추진 동향을 설명했고 러시아는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6자회담 재개 여건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 과정에 대해 러시아측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대화재개에 앞서 북한이 해야 할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같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쌀지원을 요청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美 “스타인버그-다이빙귀, 생산적 협의”(1/28)**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과 만났으며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주중 미국 대사관 측이 밝혔다.
 - 미 대사관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타인버그-다이빙귀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동에 성 김 미국 북핵 6자회담 특사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다이 국무위원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 수행 당시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만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났다고 보도했다.
 - 회동에서 다이 국무위원은 “(미중간에) 소통과 교류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의 음력에 따르면 신묘년인 올해에 미중이 양자관계의 모든 면에서 (토끼처럼) 더 빠르게 일하자”고 제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다이 국무위원 이외에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다이 국무위원과의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 이란핵, 수단 문제 등의 국제이슈는 물론 양자관계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 간 합의 후속조치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타인버그 장관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든지 그렇지 않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서 별도로 논의하든지 간에 적어도 북핵 6자회담 밖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스타인버그 부장관도 이런 미 행정부의 의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됨.
- 스타인버그 장관은 26일 한국 방문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형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북한의 UEP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6자회담 안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한·러 6자수석 회동..“지금 중요한 시기”(1/28)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음.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방안을 비롯한 북핵관련 현안을 논의했음.
- 회동에서 위 본부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고 이에 보로다브킨 차관은 “지금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 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UEP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여 러시아측의 반응이 주목됨. 또 위 본부장과 보로다브킨 차관은 남북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로다브킨 차관은 러·일 정책협의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뒤 이날 낮 방한했고 30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는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대사가 동행했음.

●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무용론 제기(1/28)

-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의 불능화 및 궁극적인 폐기를 일선에서 진두진휘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동아태



- 차관보가 27일 공개적으로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음.
-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작년 가을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우리나라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종전까지 그런 시설이 없었다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도 북한이 이처럼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음.
 - 힐 전 차관보는 “6자회담 프로세스는 끝났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6자회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강연에 참석했던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경험이 있는 힐 전 차관보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행정부를 중심으로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임.
 - 또 그는 북한이 2009년 4월에 우리나라 농축시설 건설을 시작해서 지난해 말께 공사를 완료했다는 헤커 박사의 전언에 대해 “그것은 마치 김일성이 36개홀 연속해서 흡인원을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로”라는 비유를 들어 북한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관련시설을 구축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 그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북한 핵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불능화 과정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어 힐 전 차관보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의 비확산체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궁극적으로 역내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음.
 - 힐 전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힐 전 차관보는 북한문제를 다루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원치 않는 대북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동북아 역내 군사적 준비태세를 점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미국 행정부에 권고했음.

● 美 “北, 도발에 책임지는 것 보고 싶어”(1/28)

- 미국은 27일 남북간 대화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남북간 대화를 환영하며,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이 최근의 도발과 역내 긴장을 높인 파장에 책임을 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다음달 11일 열릴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무슨 결과가 나



- 오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음.
-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워싱턴 포린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상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가진 진짜 불만을 북한이 해소할 것을 우리는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의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회부 문제와 관련,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UEP 문제가 거론됐음을 지적하면서 “이 성명은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 준수 부족을 평가하는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그(우리농 농축) 문제는 확실히 유엔 안보리가 계속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음.
- 해머 대변인도 “북한은 국제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자신들이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그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성취와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천안함·연평도, 6자에 영향주나 조건아냐”(1/26)

-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6자회담 재개와 직접 관련있는 조건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남북간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재개를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직접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됨.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조건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임.
-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간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해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다”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목표가 충족돼야 하며 이것은 우선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음.
- 정부는 현재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중단과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을 포함한 비핵화 조치를 관련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남북간 비핵화 대화를 통해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날 회동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국 등 관련국들을 상대로 협의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이어 안보리 상정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반드시 안보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은 핵능력을 더 키운다는 면에서 심각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UEP의 안보리 상정에 부정적인 중국의 입장에 대해 “지난 20일 UEP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중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의 입장이 진화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28일 중국에 가서 UEP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타인버그 “北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야”(1/26)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6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논의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어떤 형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강력할수록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스타인버그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북한의 UEP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의제로 상정해 적극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것임을 시사함.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고위급 군사 예비회담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매우 지지하며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중국도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의 중요한 첫번째 수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 면에서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는 남북대화를 통한 여건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북한이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의미있고 진지한 대화를 향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특히 “북한은 도발행위들이 우리에게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사·정치분야의 한·미간 협력과 공조는 북한이 협박과 회유를 통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앞으로의 상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에 대해 진지하게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들과 진지한 움직임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며 “북한이 그 같은 방향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도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장관이 북한의 도발과 핵프로그램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한·미공조는 “찰떡(sticky rice cake)과 같다”고 표현했다.

● 김외교-美스타인버그 회동..北 UEP 협의(1/26)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받고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방안과 6자회담 재개의 여건조성을 위한 남북대화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기쁘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데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도 그렇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연두교서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촉구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신호이며 매우 적절한 메시지”라며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다루는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에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는 지난 2년간 함께 일해왔고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는 결정을 공유해왔다”며 “나는 그것이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고 우리가 더 좋은 입장이 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 장관과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회동에는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총괄담당 국장과 성 김 미 6자회담 특사 등이 배석했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고 오후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한 뒤 27일 오전 일본 도쿄로 출국할 예정임.

● 中외교부 “한반도 정세 완화 조짐”(1/25)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5일 “현재 한반도의 정세에 완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 기간에 미국이 북한에 압력행사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유관 각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각 목표가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왔고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공헌해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김외교 “남북 비핵화대화, 6자회담 테두리내”(1/2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우리 정부가 제안할 남북간 ‘비핵화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 문제는 아직 관련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핵화 회담 제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남북 사이에 회담의 프로세스가 겨우 시작된 단계여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스타인버그 내일 방한..“北UEP 안보리 대응”(1/25)

-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을 총괄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방한함.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이행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대화와의 이통한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당일 새벽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들이 25일 밝혔음. 이 자리에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북핵관련 정부 핵심당국자들이 배석함.
- 이어 오후 1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여건조성을 위해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의해나가자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핵화 고위급 남북대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 또 북핵문제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UEP 문제에 대한 안보리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소식통은 “북핵 관련사항은 이미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UEP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조치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당일 저녁 도쿄로 출국해 27일 일본측과 협의를 가진 뒤 28일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 외교의 실세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다이 국무위원의 회동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국의 협조와 역할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 UEP 문제의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를 둘러싼 입장차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됨.
 - 북한 UEP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를 먼저 추진한 뒤 6자회담에서 이를 논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중국은 안보리 대신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다이 국무위원은 지난 23일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안보회의 서기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 제5차 중·러 전략안보회의에 참석 중이며 25일 귀국할 예정임. 양국은 다이 국무위원의 방러를 계기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음.

● 다이빙궈 러시아 방문중..북핵도 논의(1/24)

-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3일 러시아를 방문했음.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다이 국무위원이 러시아의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안보회의의 서기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중이며 양국간 제5차 전략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다이 국무위원은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하



- 고 25일 귀국함.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 다이 국무위원은 중국 외교의 실무 외교사령탑으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수행했으며 베이징(北京) 도착 직후 다시 모스크바로 향했음.
 - 다이 국무위원은 후 주석의 방미 직후인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와의 전략안보회의 참석하는 일정 이외에도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방미 논의와 관련해 러시아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이 국무위원은 중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중 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중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명시한 점을 설명하고 러시아 측과의 후속 협의를 벌일 것으로 관측돼 주목됨.
 - 다이 국무위원은 아울러 러시아측의 관심사인 이란 핵문제는 물론 핵 비확산국제체제 강화, 대(對) 테러대책 등에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됨.

● 헤커 박사 “美, 北核시설 정교함에 매우 놀라”(1/24)

- 지난해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을 전 세계에 공개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 영변에 있는 우라늄 원심분리기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2세대(P-2)”로, 미국 당국자들도 현대적이고 정교한 데 대해 “매우(quite) 놀라워 했다”고 전했음. 미 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의 시설이 것처럼 정교하다면 이미 오랫동안 가동해 온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헤커 박사는 말했음.
- 헤커 박사는 또 자신이 직접 확인한 북한의 원심분리기 2천 개로는 매년 한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북한이 우라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음.
- 헤커 박사는 23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내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실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전했음.
- 헤커 박사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이 원심분리기들이 북한의 주장처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져 이곳으로 옮겨졌을 것이 확실한 만큼 다른 곳에 원심분리기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자신의 전문가적인 의견이지만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음.
- 그는 외견만 봐서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교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통제실이 상당히 정교한데다 ▲원심분리기 자체도 P-2 즉, 2세대에 속한 것처럼 보이고 ▲북한기술자들이 확인해 준 원심분리기 재료가 강철합금인 점과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6불화,



hexafluoride)를 만드는 방법 등도 모두 P-2의 것과 일치하는 점으로 미뤄 북한기술자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매우 정교한 2세대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석결과라고 말했다.

- 헤커 박사는 “이 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도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당히 현대적이고 정교했다는 점 때문이었다”면서 “2004년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공개 때도 놀랐지만 이미 아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서 지금처럼 매우 놀라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헤커 박사는 “북한이 영변의 원심분리기로 민간용인 저농축우라늄(LEU)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직접 확인한 원심분리기 2천 개로는 매년 1개의 핵폭을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다른 곳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겠지만 1년에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 정도로 대규모 시설을 보유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플루토늄으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핵실험이 요구되는 등 북한이 우라늄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 헤커 박사는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맞춰 경수로를 건설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비현실적’(not realistic)인데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핵안전은 각종 경험이 축적된 여러 나라와 공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은 현재 사실상 고립된 상태라는 점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는 방사능 유출을 통한 인근지역 오염 등이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핵폭발과 같은 대규모 재난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과거 24년간 핵을 다루면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헤커 박사는 그 같은 사고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묻은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추론하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음.

나. 미·북 관계

● 미국방부 “北, 5년 이전에 직접적 위협”(1/27)

-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보다는 빠른 시기에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렐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 북한을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표현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모델 대변인은 “게이츠 장관이 ‘북한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그것은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5년 보다는 빠른 시점에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 모델 대변인은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는 걱정거리”라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 일본,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북한이 도발적이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핵무기와 운반수단(미사일)의 추구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아시아에 미군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과 일본에서의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그는 현재 한국에는 2만8천500명, 일본에는 5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미국은 이미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태평양 지역의 재배치는 동남아 지역을 포함해 태평양 연안에 걸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바마 “北 핵무기 포기해야”(1/2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한편 미 의회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9시(미 동부시각) 미 의회에서 행한 올해 국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최소 7만개 늘릴 수 있는 무역협정을 지난달 한국과 맺었지만, 이 협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례 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나는 이번 의회가 조속히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무역협정을 이행하겠지만 미국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협정에만 서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것이 바로 이러한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설이후 北·中 고위급 상호방문 추진할 듯(1/30)

- 설연휴 이후 북·중 양국이 연례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급 상호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미·중이 정상회담 이후 모



- 색중인 대화국면 전환과 남북간 군사회담 추진 움직임과 맞물리며 6자회담 재개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됨.
-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이날 “설이후에는 북·중 양국 지도층이 연초 상호인사하는 관례에 따라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가 방북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 역시 당 또는 외무성 고위직 인사가 베이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상호방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 등 당면현안에 대한 양국 고위층의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에 따라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할 것으로 관측되며, 북한측에서는 6자회담을 담당하고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왕 부장이 방북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임. 지난해 2월6일 왕 부장은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뒤 후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했고 이어 9일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시동을 건 바 있음.
 - 북·중간에 6자회담 재개문제가 논의될 경우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수위와 일정을 놓고 중국측과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특히 지난달초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측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요구에 대해 “알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한 외교소식통은 “북·중 간에는 이미 비핵화 선행조치에 관해 일정한 원칙이 서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구체화된 수위와 시점을 놓고 양측간에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최근 관련국들에게 대규모 식량지원을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할 때 북·중간에는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4월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으로 승진한 뒤 중국을 단독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을 당의 요직에 이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 국가기구의 요직에 임명해 대외적 위상을 높인 뒤 중국을 방문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당 65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 중인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통해



김 위원장과 북한의 새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음.

● 北-中 무역 작년 34억달러..사상 최대(1/27)

-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작년에 30% 증가한 34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2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세관의 집계 결과 작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34억7천168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의 북한과 중국 무역액임. 이는 군사적 도발을 반복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50.6% 증가한 11억9천323만 달러로 석탄과 수산물이 많았음.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은 20.8% 증가한 22억7천845만 달러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이 많이 늘었음.
- 2009년의 북-중 무역액은 5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중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와 11월에 실시된 디노미네이션에 의한 혼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 감소했었음.

● “北, 對中광물수출 총력·외화난 때문인듯” < RFA > (1/25)

- 심각한 외화난에 처한 북한이 대 중국 광산물 수출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
- 북한산 광산물 무역을 중개하는 조선족 사업가 박모씨는 이 방송에 “북한 무역총회사 간부들이 찾아와 경쟁적으로 광산물 수출상담을 제의하고 있다”면서 “석탄, 철광석, 몰리브덴 같은 종전의 수출품목 외에 구리, 금, 알루미늄 광석을 팔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박씨는 또 “북한에서 광산물은 군(軍)이나 당의 특정무역회사들만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인데 여러 무역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물수출을 적극 독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북한 무역회사들은 광물 인도에 앞서 북한 은행에 대금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을 감수할 중국 기업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보낸 광물의 양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달라 인수를 거부하는 일도 자주 있다”고 덧붙였다.
- RFA는 “광물을 제값 받고 수출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때 원석 수출이 금지된 적도 있었다”면서 “이런 원칙도 깨고 광물수출을 독려하는 이유는 그만큼 외화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 무역업자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 “北, 작년 중국서 사상 최대규모 쌀 수입” < VOA > (1/25)

-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만3천945t의 쌀을 수입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중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25일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는 전년보다 5천t, 종전에 가장 많



있던 2007년(8만1천t)보다는 3천t 정도 많은 것으로, 수입액에서도 사상 최고인 미화 3천544만 달러를 기록했다.

-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했던 옥수수의 경우 작년 수입량이 전년보다 1만5천t 적은 8만7천631t으로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2천350만 달러로 전년(2천430만 달러)과 비슷했음. 지난해 양국 간 농수산물 교역액은 총 3억 5천390만 3천 달러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북한은 8천99만 8천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쳐 1억 9천107만 달러의 적자를 봤음.
-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은 쌀, 옥수수, 식용유, 설탕, 목화, 버섯 등이었는데, 수입액에서는 식용유가 3천585만1천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은 쌀, 옥수수 순이었음. 수출품 중에는 오징어 등 연체동물류와 냉동어류가 3분의 2를 차지했음. VOA는 “중국의 대북 원조 등 비공식적 지원은 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北 “과거 청산해야 北日 관계개선 가능”(1/25)

-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日北 국교정상화 추진’ 발언에 대해 북한이 ‘선(先)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일관계 해결의 근본은 과거 청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정책작성자들이 조일(북일) 현안 문제와 관계 개선에 관심을 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죄악을 덮어두고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인민과 인류 양심, 정의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음.
- 이 논평은 또 “강점 기간 일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조선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악랄하게 책동했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죄행이 전후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결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면서 “북일 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 문제는 오직 과거청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간 총리는 24일 일본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 같은 도발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한 뒤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도모하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일북)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음.

● 日 총리 “北과 현안 포괄해결.국교정상화 추구”(1/24)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4일 북한에 대해 납치자·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과 함께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국과는 안전보장을 포함한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간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의 올해 안보외교정책을 천명했음.
- 간 총리는 북한에 대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 등 도발적 행위를 반복하지말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日-北 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핵·미사일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에 의한 납치자문제와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고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그는 한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 “작년의 총리 담화를 발판으로 한국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안전보장면을 포함한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음.
- 중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음.
- 간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전제한뒤 “아시아 태평양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유재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침체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헤이세이(平成)의 개국’을 위해 한국 유럽연합(EU) 등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음.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협의를 계속해 오는 6월에 협상 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음.

마. 기 타

● <中 전문가 “통일한국 핵 보유, 위협 안돼”>(1/30)

-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29일 오후(현지시각) 열린 토론에서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미군의 주둔 여부를 놓고 극명한 이견을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음.
- 특히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정책론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옌쉐통(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음. 옌쉐통 학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음.



- 엔쉐통 학장은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데 핵 보유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국가간의 관계”라고 말했다.
- 그는 “설사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한국은 7천만 명을 넘는 인구와 경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는 위협이 되겠지만, 중국에는 위협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반면,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전 일본 외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남북한 통일에는 2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핵 없는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했다. 요리코 전 외상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 통일은 일본으로서는 수궁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가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되서는 안 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은 “1950년대처럼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위치와 역할의 문제가 통일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크로닌 선임고문은 “통일 후 미군은 전투부대가 아닌 병참이나 공병대 등이 주둔하면서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안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통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서는 안 된다”며 “통일한국이 시장경제를 하면 민주주의가 뒤따르게 되고, 결국 일본, 미국 등과의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에 참여하게 될 텐데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며 통일은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 문 교수는 통일방안에는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안한 남북연합제통일, 노태우 정부 때 나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北, 남북관계 개선 기대 2년 후로” <중학자>(1/28)

-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정책론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엔쉐통(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7일 AP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 중인 엔쉐통 소장은 토론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강경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엔 소장은 북한 정권 담당자들이 “매우 끈기있게 기다릴 것”이며 2년 후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상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엔 소장은 중국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며,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해하는 한 현 시점에서 중국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며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햇볕정책은 남북한의 평화를 유지해주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햇볕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치달은 남북관계는 최근 북한이 적대 행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화를 제의하면서 다소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엔 소장은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음.
- 그는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은 이 대통령 임기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고 사회가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한국은 햇볕정책이 북한을 전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햇볕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경제지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햇볕정책이 지속되는 것을 선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일의 권력승계 성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엔 소장은 “김정일이 오래 생존하면 할수록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속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일의 아들이 성공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답변했음.

● 러-北 철도당국, 북한 내 4개 기차역 개보수(1/28)

-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 전문가들이 양국 국경 지역에서 북한 나진항에 이르는 철로 상에 있는 4개의 기차역을 개보수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28일 보도했음.
- 극동 교통 인프라 시설국 국장 세르게이 막심체프는 28일 “보수된 역은 양국 접경 지역의 두만강역을 포함한 4개의 기차역”이라며 “보수 작업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핫산 역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로 개보수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음.
- 이번 개보수 작업에는 15km에 이르는 철로 교체 공사가 포함됐으며, 현재 핫산-나진 구간 내 터널들을 수리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막심체프 국장은 설명했다. 러시아 측은 또 이 구간에서 도로와 송전선을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장비와 설비들을 북한 두만강 역으로 옮긴 상태라고 통신은 전했다.



- 핫산-나진 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개보수 사업은 2006년 러 극 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남·북·러 3국 철도 당국자 회담에서 결정됐었음. 하지만 이후 북핵 문제에 따른 남북 관계 경색과 2008년 국제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었음.
- 러시아는 북한과의 별도 합의를 통해 핫산-나진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백악관 “한·미FTA 가능한 한 조기통과 기대”(1/28)

- 미국 백악관은 27일 “우리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가장 먼저, 가능한 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방문하지 않는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명백히 한국과의 FTA를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머 대변인은 “한미 FTA는 주요한 성과이며 한미 양국의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언제 제출할지를 묻자 “우리가 언제 의회에 그 협정을 제출할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 정부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일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FTA 합의문서 내달 중순 정식 서명(1/27)

-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일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내달 중순께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27일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 합의 결과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담은 1개의 서한과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 합의 내용 가운데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한국업체 근로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 한미 양국은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순께 서명할 예정이며 합의문서는 서명 직후 공개됨. 서명에 앞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한·미 FTA 조문화작업 조만간 마무리(1/26)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양국 간 조문화작업이 많은 진전을 이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가 26일 밝혔다.
-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조문화 작업에 대해 “양국간 중요한 요소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주말 미국 LA에서 만나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조문화 작업에 대해 협의했음.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조문화 작업이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서명할 계획임.
- 안 조정관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방법과 관련, “기존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별도로 비준동의를 추진할지, 묶어서 처리할 지 등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조만간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는 양국에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미, 역외탈세조사 공조 한층 강화”(1/25)

- 한국을 방문중인 빅터 송 미국 국세청(IRS) 범칙수사국 국장은 25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작년 8월11일 체결됨으로써 양국 과세당국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공조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 재미교포 3세인 송 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동시범칙조사 협정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간 협력 및 일관된 법집행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 그는 “동시범칙조사협정을 통해 미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사기간도 단축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공동대응노력이 인터폴(국제사법경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



력을 미국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 송 국장은 미국 IRS의 역점추진 분야도 역외탈세방지라고 소개한 뒤 해외계좌 보유내역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제도를 통해 1만8천명이 자신신고했다며 납세자의 해외계좌정보가 양성화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외 금융소득을 제대로 신고납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외계좌신고제도의 성과를 역설했음.
- 그는 또 역외탈세방지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꼽으며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됐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입고객의 해외계좌를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 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면서 “이런 심리적 억제효과를 세수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음.

나. 한·일 관계

● 日자민 간부 “조선왕실의궤 반환 찬성”(1/30)

- 일본 제1 야당 간부가 한반도 약탈 문화재를 돌려준다는 내용의 일한(한일)도서협정 비준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음.
- 아이사와 이치소(逢澤一郎)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 취재진에 현재 개최 중인 정기국회 기간에 일한도서협정 비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음. 아이사와 국회대책위원장은 “당내에 엄격한 의견도 있지만, 일한관계나 전체적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서 확실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국회대책위원장의 의견은 국회 내에서 당의 입장을 대표함.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협정 승인을 추진했지만, 정쟁에 밀려 무산됐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장일치로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음. 제2 야당인 공명당은 앞서 협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음.

● “日 민주당 간부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 참석”(1/27)

- 일본 민주당의 와타나베 슈(渡邊周) 국민운동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음. 통신에 따르면 와타나베 국민운동위원장은 다음달 22일 시마네현이 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음.
-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그동안 자민당 의원이 주로 참석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당 시마네현 대표인 고무로 히사아키(小室壽明) 중의원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음.



- 통신은 와타나베 국민운동위원장이 독도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정권이 다케시마 문제의 대응에 뒷북을 치고 있는데 대한 국내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와타나베 민주당 국민운동본부장은 5선 의원으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서 총무성 부대신으로 일했음.

● 日 총리 ‘한반도 자위대 파견 추진’ 발언 되풀이(1/27)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비행기나 함선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자민당 의원이 ‘한반도 유사시처럼 외국에서 분쟁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비행기나 함선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데 대해 “자위대가 파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대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日 관방 “올해는 이 대통령 방일 실현되길”(1/25)

-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이 25일 한일 양국간에 일정을 논의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올해는 꼭 이 대통령을 일본에서 뵙고 싶다”는 뜻을 한국측에 전했다.
- 에다노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축하인사차 총리관저를 방문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양국 외교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대사는 “공존·공영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원년인 올해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지난 15일 방한때 이 대통령에게 국민 방일을 원하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뜻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이 “꼭 일본을 방문할 것이며 방일시기를 협력해 가자”고 답변하는 등 양국간에 이 대통령의 국민 방일이 논의되고 있음.

다. 미·중 관계

● “中, 동평-21D 개발해도 美 상대 안돼”(1/28)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방어시스템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음. 신화통신은 이날 신화망



- 에 ‘미국이 중국의 항모 킬러 전단을 겨누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폈음.
- 지난해 말 중국이 1천500km 밖의 항공모함도 격침 가능한 ‘동평(東風)-21D’를 5년 내에 개발할 예정이고 사거리 1천100km인 ‘창젠(長劍)-10’ 순항 미사일 등의 실전배치로 미 항모 전단에 맞서는 해안방어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미국이 이를 ‘압도’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임.
 - 신화통신은 국방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동평-21D 개발 소식에 자극을 받아 지난 20일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2억1천800만 달러에 달하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 실증개발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신화통신은 미 해군의 요구로 록히드 마틴이 전투기 등을 이용한 공대함 미사일, 군함 등의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은 3년이 소요돼 동평-21D 개발에 걸리는 5년보다 훨씬 짧다고 전했다.
 - 따라서 중국이 동평-21D 개발로 이를 장착한 ‘미 항모킬러’ 전단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개발하게 될 장거리 대함 미사일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신화통신은 이와 더불어 미국이 동평-21D의 공격 사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태평양함대 운용 전술을 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해안 방어시스템 개발 노력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음.
 -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제스처는 중국에 “미국에 필적하는 함선을 만들려고 힘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쓸데없는 힘만 낭비할뿐더러 아무런 성취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
 -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항모킬러’ 전단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상대 전단의 군함 선체를 뚫을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신화통신은 이와 함께 “중국의 동평-21D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신형무기”라면서도, “예측가능한 미래에도 미국 해군은 의심할 바 없는 1인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음.

라. 미·러 관계

● 러 상원도 새 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1/26)

- 러시아 연방회의(상원)가 지난해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안을 26일 통과시켰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이날 비준안 검토 회의에 참석한 상원 의원 137명 전원이 비준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의원들은 질의응답 등을 포함해 15분 만에 비준안 승인을 끝냈음.



-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마르젤로프는 비준안을 제출하면서 “새 START 협정이 지구의 핵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하루 전인 25일 START 협정에 대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러시아 상·하원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 START 협정은 러·미 양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과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정식 발효됨.
- 러시아 의회가 승인한 비준안에는 START 협정과 미국이 유럽에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과의 연계, 러시아 정부의 전략 핵전력 발전 프로그램 채택, 러시아의 START 협정 탈퇴 조건 명시 등 5개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단서 조항에는 특히 START 협정과 미국 MD 간의 연관 관계를 규정한 협정서 전문 조항이 양측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 조항은 모든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들어갔음. 이에 따라 협정과 미 MD 간의 연관성 문제가 향후 협정 이행 과정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커졌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미 상원 의원들이 START 협정과 미국 MD 간의 연계를 명시한 협정 전문 조항을 문제 삼아 비준을 미루자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미국의 MD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설득했음. 이후 미 상원의 여·야 의원들은 START와 MD가 무관하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었음.
- 이처럼 협정 전문 조항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의원들이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비준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정 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 4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새 START는 각국이 실전 배치한 전략 핵무기를 이전 협정의 2천200기에서 1천550기로 줄이고, 상호 무기 모니터·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마. 일·러 관계

● <러’ 정부 고위인사, 쿠릴열도 방문 잇따라>(1/30)

-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극동 쿠릴열도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음. 러시아 지역개발부 빅토르 바사르긴 장관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시로 30일 쿠릴열도를 방문한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 바사르긴 장관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보건사회개발부, 어업청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쿠릴열도 중 가장 큰 이투롭 섬의 쿠릴스크와 열도 최남단 쿠나시르 섬의 유즈노-쿠릴스크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바사르긴 장관의 쿠릴 방문은 지난해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쿠나시르를 방문하고 이어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가 12월 이투롭과 쿠나시르를 찾은 데 이어 올 1월 20일 드미트리 불가코프 국방차관이 역시 이투롭을 방문한 데 뒤이은 것임.

- 러시아 지역개발부는 바사르긴 장관의 쿠릴 방문이 2007부터 8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일부에선 러시아 고위관리들이 이처럼 쿠릴열도를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분쟁지역의 영유권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열도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음.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는 2차대전 종전 이후 전승국인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다고 끈질기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바. 중·러 관계

● 中·러, 국제이슈에 긴밀협력키로(1/25)

- 중국과 러시아가 제5차 전략안보회담에서 국가와 지역,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음. 중국 외교의 실무사령탑으로 후진타오(胡錦濤) 방미에 수행했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중국측 대표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던 이 회담에서 양국은 주요 국제이슈와 전략적파트너십 발전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측에서는 니콜라이 파르투셰프 안보회의 서기가 대표로 참석했음.
- 신화통신은 국제 이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의 이런 의견일치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향후 북핵 6자회담에서의 중국-러시아의 '공조' 행보가 주목됨.
- 신화통신은 아울러 양국이 전략적 상호신뢰 증진과 글로벌 안보 개선을 위해 현재의 양국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10년 내에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을 하자고 합의했다고 소개했음. 양국은 아울러 상호 신뢰와 윈-윈 협력, 선린의 원칙을 재확인했음.
- 다이 국무위원은 전략안보회담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간 협력 발전방안과 관련해 의견이 오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을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그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국제 및 지역 이슈에서 모든 협력을 증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이 국무위원은 지난 23일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다이 국무위원은 이 기간에 후 주석의 방미 관련 내용을 러시아 측에 전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이란핵, 핵 비확산체제 강화, 대(對) 테러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